

## 독일의 문화외교

박병석,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문화외교란 문화와 예술, 학문 등의 매개체를 통하여 상호이해를 증진시키며, 국제사회에서 자국 위상을 높이고 호감을 얻기 위한 일련의 외교적 행위를 말한다.

독일 문화외교의 일차적 특징은 슈퍼파워 미국의 '제국지향적' 이거나 한국과 같은 신흥산업국 또는 소강국들이 추구하는 '국격 제고'가 아닌 이질 문화 간 대화와 소통, 공존에 초점을 둔다는 점에 있다. 탈냉전, 세계화, 정보화, 다문화 사회 등 국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1999년 말 발표한 문화외교 정책 '콘셉트 2000' 도 소통과 이해에 중점을 두고 있다.

독일 문화외교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독립적인 활동단체들을 들 수 있다. 특수법인 형태로 운영되는 이들 중개단체는 비록 연방 예산에 의존하고 있지만, 법률적으로나 인적으로 활동의 자율성을 보장받는다. 독일문화원과 독일학술교류처, 대외연구소, 알렉산더호볼트재단, 도이체 벨레 등이 여기에 속한다. 그 외 주요 문화외교 주체로는 정치재단과 사회장학재단 그리고 주와 지자체 등이 있다.

오늘날 독일 문화외교의 지향점은 유럽통합의 심화에 있다. 여기서 문화적 대화는 유럽의 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수단이 된다. 그러나 유럽의 정체성 기반은 문화자체가 아닌 법치국가, 다원주의, 인권, 민주주의를 내용으로 하는 정치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는 탈냉전과 세계화라는 변화된 국제질서 속에서 문화 다양성 보장과 갈등 예방 그리고 평화 정착이라는 문화외교의 보편적 목적에도 일치한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 1. 문화외교의 개념과 지향점

문화외교란 공공외교의 핵심 분야로서 문화, 예술, 학문과 같은 매개체를 통하여 상호이해를 증진시키며, 나아가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위상을 높이고 호감을 얻기 위한 일련의 외교적 행위를 말한다. 하지만 문화 분야에만 국한하지 않고 개발원조와 같은 경제 분야까지 포함한다는 점에서 문화외교는 공공외교와 동의어로 쓰이기도 한다. 독일에서는 문화외교나 공공외교라는 직접적인 표현대신 대외 문화정책(Auswärtige Kulturpolitik)으로 통용된다.

미국의 경우, 과거 경제와 군사력 등 일방적인 하드파워로부터 탈피하여 부시 2기부터는 자유, 민주주의 등 전통적 소프트 파워로의 전향을 그리고 오바마 행정부에 와서는 양 요소를 배합한 스마트 파워의 활용을 강조한다. 공공외교와 문화외교는 이런 외교정책을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중요시된다. 여기엔 물론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이라는 국제사회에서의 주도적 위상과 역할이 배경으로 작용한다.

이에 비해 한국과 브라질, 중국 등 신흥 산업국들의 경우는 국격 제고(Nation Branding)의 관점에서 문화외교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 과거 후진국 내지는 개도국 이미지를 탈피하고, 첨단기술과 고급문화로 ‘장식된’ 국가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심어주며, 이를 통해 자국 생산품의 가치도 향상시키고자 한다. 스위스, 덴마크, 뉴질랜드 등 이른바 강소국의 경우도 기존의 국가 브랜드 가치를 유지, 발전시키려는 목적에서 역시 문화외교에 힘을 쏟는다.

하지만 독일의 문화외교는 ‘제국 지향적’ 이거나 ‘국격 제고’ 보다는, 일차적으로 이질 문화 간 대화와 소통, 공존에 초점을 둔다. 이를 통해 이질 문화로 야기되는 국제사회의 잠재적 갈등을 예방코자 한다. 특히 유럽연합의 확대·심화는 갈수록 정치·경제·사회 분야의 국경을 얽게 만들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곧장 생활세계에서의 문화 간 차이를 봉합하는 데까지는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소통의 문화외교는 더욱 중요시된다.

---

독일의 문화외교는 ‘제국 지향적’ 이거나 ‘국격 제고’ 보다는, 일차적으로 이질 문화 간 대화와 소통, 공존에 초점을 둔다. 이를 통해 이질 문화로 야기되는 국제사회의 잠재적 갈등을 예방코자 한다.

---

## 【 2. 신문화외교 ‘콘셉트 2000’ 】

### 2.1. ‘콘셉트 2000’의 기본 과제

21세기로 넘어오면서 본격 전개되었던 유럽통합과 독일통일, 세계화 그리고 이로부터 귀결되는 다문화 사회의 확산이라는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직면하여 독일 연방정부는 1999년 중반 ‘콘셉트 2000’ (Konzeption 2000)이라는 새로운 문화외교 정책안을 발표했다.

여기서 독일 정부는 외교정책의 한 축인 문화외교에 통합적 역할을 부여하고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즉, 대화의 핵심 주제나 거점을 더 늘리며, 특히 중동·남동유럽에서의 활동을 강화하고, 세계화 과정에서 희생되기 쉬운 문화적 정체성과 다양성을 중시한다. 예산 중복을 피하고, 지방정부·단체와 기업인, NGO의 역할을 더욱 높이며, 재외 문화기구나 학교도 현지 민간이나 공공 파트너들과 공동으로 조직·운영토록 유도하여 문화외교의 기반 비용과 프로그램 비용이 별개의 것으로 전개되지 않도록 한다. 문화외교 관련 비자 발급이나 교육 이수 인정과 같은 관료적 장애들을 없애기 위해 유관 기관들끼리 협력하며, 인터넷과 같은 통신기술을 문화외교 활동에 적극 활용한다.

---

문화외교 관련 비자 발급이나 교육 이수 인정과 같은 관료적 장애들을 없애기 위해 유관 기관들끼리 협력하며, 인터넷과 같은 통신기술을 문화외교 활동에 적극 활용한다.

---

### 2.2. ‘실천계획: 민간 차원의 위기 예방과 갈등 해소 그리고 평화 정착’

‘콘셉트 2000’에서 제시한 문화외교 과제들을 실행하기 위해 연방의회와 연방정부는 그간 분야별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가운데 2004년 5월 12일에 발표한 ‘실천 계획: 민간 차원의 위기 예방과 갈등 해소 그리고 평화 정착’은 위기 예방과 평화 정착의 측면에서 작성한 실천 결의서이다.

여기서는 문화외교의 위기·갈등 예방 기능을 강조한다. “위기 예방은 문화적 차원을 지니고 있다. 문화 간 이해와 존중은 국내에서든 국제관계에서든 위기 예방의 결정적 조건이다. 여기엔 대화와 교류뿐 아니라, 위기 예방과 관련된 가치와 수단을 문화적 방법으로 전파하고, 아울러 비폭력적 갈등 대처를 촉진하면서 현안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허용하는 교육체계를 지원하는 것도 포함된다” (Bericht der Bundes-

regierung 2004, Aktionsplan Zivile Krisenprävention, Konfliktlösung und Friedenskonsolidierung).

또한 문화외교를 통해 공적 영역뿐 아니라 민간 영역의 가치 교류를 확대하고, 같은 맥락에서 시민사회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문화외교 활동가의 자율성과 민간 신분은 공공기관의 외교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유럽·이슬람 간 가치대화를 민간 차원에서 자유롭게 진행하는 이슬람 대화 프로그램은 공식 외교정책이 추구하는 민주주의적 체제 전환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2004년 발표된 실천 계획은 다시 2006년 4월에 1차 보고서, 2008년 4월에 2차 보고서로 만들어져, 연방의회에서 이것을 토대로 그간의 진척 상황과 문제점을 점검하고, 아울러 개선할 사항과 방법들을 검토해 왔다.

### [ 3. 문화외교의 실행 체계 ]

---

독일의 문화외교 정책 수립은 연방외무부에서 작성하여 연방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시행은 연방외무부를 축으로 이뤄지지만 그 외 연방부처들도 병렬적 관계에서 협력한다.

---

독일의 문화외교 정책 수립은 연방외무부에서 작성하여 연방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시행은 연방외무부를 축으로 이뤄지지만 그 외 연방부처들도 병렬적 관계에서 협력한다. 주와 자치단체들도 주어진 범위 내에서 문화외교 활동을 펼친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들도 중개단체와 협력한다. 주요 중개단체로는 독일문화원과 독일학술교류처, 훔볼트재단, 대외관계연구소 등이 있으며, 독일포털 그리고 독일대외방송인 도이체 벨레(DW)도 중요한 전파자이다. 그 외 정치재단을 비롯하여 각종 사회재단들도 부분적으로 중개단체와 같은 문화외교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최근에는 NGO도 이 분야에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들 활동에서 중요시되는 것은 민관파트너십 원칙이며, 특히 개발 원조와 대외 경제정책 분야에서 그렇다. 연방과 주 사이의 협력에서도 '주의 업무와 책임에 속하는 문화 관련 국제조약은 반드시 주 문화부장관회의를 거쳐야 한다' 는 린다우어 협정(Lindauer Absprache)을 존중한다.

## 4. 독일 문화외교의 기구별 · 단체별 역할과 활동

### 4.1. 연방의회

연방의회는 각종 국제의원단체에 참여하여 문화외교에 기여하고, 동시에 자체 정보수집에 의해 문화외교의 주무기관인 연방외무부를 비롯한 관련기관과 단체들의 활동을 감시하거나 통제한다.

연방의회는 비록 직접적 시행자는 아니지만, 예산을 통제한다는 점에서 문화외교의 방향타 역할을 한다는 데 중요성이 있다. 예로써, 중개단체와 대외방송의 예산을 심의, 의결하기 때문에 활동 분야의 순위와 경중을 정할 수 있다. 또한 활동 내용을 중간에 조사, 점검하여 시정을 권유한다.

특히 14대 연방의회(1998~2002, 사민 · 녹색 연정)에서 새로 설치한 ‘문화와 미디어’ 라는 상임위원회는 문화외교 업무의 심의와 통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에 상응하여 연방정부도 1998년 총리실 내에 ‘문화와 미디어’ 담당국을 신설했다. 이는 과거 산만하게 행해져 오던 외교적 문화 · 미디어 활동을 의회와 정부 차원에서 각각 하나의 기구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 4.2. 연방부처

독일 문화외교의 주무 기관은 연방외무부이나 결코 독점적 자세를 취하지 않으며, 다른 기관이나 단체들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면서 프로그램들을 운영한다.

기본 사업으로는 대학 교류, 재외 학교, 문화 프로그램, 독일어 지원 그리고 이질 문화 간 대화 등이 있다. 개별 실행프로그램으로는 “학교 - 미래의 파트너” 이니셔티브(개도국 파트너학교 네트워크 구축), “액션 아프리카” (사하라 남부 아프리카와의 문화 · 교육 협력 강화), 에른스트 로이터 이니셔티브(Ernst Reuter Initiative, 터키와의 협력 강화, 로이터는 반나짜 활동을 펼치다 터키로 탈출하여 터키정부 경제부처 지문, 전후 초대 베를린 시장 역임), “독일과 중국 - 공동 보조”(Gemeinsam in Bewegung, 공동 행사 시리즈, 3년간 여러 도시에서 진행, 지속가능 도시화, 문화공연 기념물 건립등), ‘대외학술이니셔티브’(Initiative Außen- wissenschaft, 독일과

---

연방의회는  
각종 국제의원단체에 참여하여  
문화외교에 기여하고,  
동시에 자체 정보수집에 의해  
문화외교의 주무기관인  
연방외무부를 비롯한 관련기관과  
단체들의 활동을 감시하거나 통제한다.

---

세계의 학술 교류, 유학생 유치) 등을 꼽을 수 있다.

그 외 연방부처들도 외무부와 병렬적 위상에서 다양한 문화외교 활동을 펼친다. 연방교육연구부의 경우, 필요에 따라 자체 예산을 들여 국제적 학술연구와 학생·학자 교류 등을 지원하며, 독일을 유학과 연구의 본거지로 만들기 위한 마케팅을 전개하고, ‘교육·연구 개방·국제화를 통한 혁신 2002’ 정책보고서를 발표했다. 같은 맥락에서 연방교육연구부는 독일학술교류처(DAAD)와 훔볼트재단, 독일 폴브라이트 지부 등과도 협력한다.

총리실 문화·미디어담당국(BKM)은 유럽이사회에서 독일정부의 문화 정책을 대표하고, 관련 국제기구에 협력하고 있다. 또한 외국과의 문화적 접촉·교류를 관리하고, 독일 내 소수민족의 문화를 보호하며, 재외 독일예술가와 국내 활동 외국예술가들을 지원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총리실 문화·미디어담당국은 대외 방송인 도이체 벨레(DW)의 운영에도 책임을 지고 있는데, 이 부서 대외 지원 예산의 88%가 이 방송국을 지원하고 있다.

연방내무부도 덴마크, 러시아, 카자흐스탄, 동·남유럽 등에 거주하는 재외 소수 독일인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이들의 자구 노력을 돕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만남의 장소를 운영하고, 독일어 학습, 청소년 구직, 직업교육, 재교육, 도시 자매결연 등에도 지원한다.

그 밖에 연방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도 국제 청소년 교류를 위한 몇 가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며, 연방법무부는 동구권 국가와 CIS국가들의 법률체계·사법제도 개혁을 지원한다. 연방경제협력 개발부는 개도국의 경제발전에 참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학문·대학 발전과 민주주의·인권 개선을 가져오게 하는 지원·협력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 예로써, 독일학술교류처의 개도국 우수학자 지원 프로그램(Sur Place) 및 제3 세계 장학 프로그램과 훔볼트재단의 개도국 우수학자 연구지원 프로그램 등이 있다.

---

연방경제협력개발부는 개도국의 경제발전에 참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학문·대학 발전과 민주주의·인권 개선을 가져오게 하는 지원·협력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

---

#### 4.3. 주 정부와 기초단체

주 정부의 문화외교는 지방 차원의 문화 주권 실현이라는 명분에서 이뤄진다. 독일 기본법 제30조에서 주의 자치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제32조는 대외관계 업무를 연방의 사안으로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여기에 문화외교도 포함되는가 하는 점이다. 문화는 주의 정체성과 정당성을 유지하는 본질적인 요소이지만 연방은 자신의 문화적 그리고 문화 정책적 관여 범위를 크게 확장시켜 왔다. 이에 주들은 문화 주권을 지키기 위한 법률적 조치로서 지난 1957년 11월 14일 맺은 ‘연방의 대외조약 체결에 관한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의 양해각서’에 근거하여 이른바 ‘린다우어 협정’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연방의 문화정책은 반드시 주와 협의를 하도록 했다.

공공분야 문화 지출에서 갈수록 주와 지자체들의 부담이 늘고 있다. 특히 문화외교의 국내 부분 소모 경비는 주와 지자체의 몫으로 돌아온다. 연방에서 직접 운영하는 문화·교육 교류 시설이 거의 없기 때문에 대부분 주와 지자체에서 제공한다. 그래서 주들이 사실상 문화교류의 기반 역할을 담당한다. 주가 직접 운영하는 문화외교 프로그램들은 대체로 대외적 홍보보다는 대내적 통합에 중점을 두고 있다.

기초단체들도 국경을 넘어 활발하게 문화외교 활동을 펼친다. 지난 20년간 독일 중소 도시의 해외 도시 자매결연 수는 두 배 이상 늘어나 5,000건을 넘는다. 이들 기초단체의 활동은 두 가지 양상을 띠고 있는데, 하나는 기초단체 내에서 전개되는 주제들, 즉 다문화와 문화대화, 이주자 통합, 국제화 등이고, 다른 하나는 대외 활동으로서 자매결연, 연락사무소나 대표부 설치, 주연합회, 초중등학교 및 대학 교류, NGO·장학재단 등의 형태로 활동하거나 국제기초단체협의회나 박람회 등에 참가하는 것이다.

#### 4.4. 중개단체

문화외교의 가장 독일적인 모델로 통하는 것은 중개단체이다. 독일은 처음부터 독립된 중개단체를 통해 문화외교를 펼쳐왔기 때문에 자율성은 항상 유지된다. 연방외무부에 따르면 “중개단체는 연방정부에서 정한 지침의 범위 안에서 ...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수립, 실행할 수 있다. 분권적 운영은 장기간의 실행을 통해 정착되었으며, 과제의 특성에 따른 차별화와 조직의 독립을 통해 우리 대외 문화 업무의 다양성과 질을 보장한다”(Runderlass vom 1. Juni 2004). 법적으로 볼 때, 중개단체는 사단법인 또는 재단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정부 예산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특수법인의 성격을 갖는다.

---

공공분야 문화 지출에서 갈수록 주와 지자체들의 부담이 늘고 있다. 특히 문화외교의 국내 부분 소모 경비는 주와 지자체의 몫으로 돌아온다. 연방에서 직접 운영하는 문화·교육 교류 시설이 거의 없기 때문에 대부분 주와 지자체에서 제공한다.

---

---

1920년 외무부가 문화국을 설치하기 이전에 이미 다수의 학술연구소와 독일학교들이 외국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독일 대외연구소와 독일학술교류처, 알렉산더훔볼트재단 그리고 독일아카데미 등이 1924-5년 사이 연방외무부에서 재정 지원을 받는 중개단체로 등록되었다.

---

비록 국가가 이들 조직의 기구, 위원회, 지도부 등에 참여하고 있지만 어느 곳에서도 다수를 점하진 않기 때문에 주어진 자율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1920년 외무부가 문화국을 설치하기 이전에 이미 다수의 학술 연구소와 독일학교들이 외국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독일 대외연구소(Deutsche Ausland-Institut 1917)와 독일학술교류처(DAAD 1925), 알렉산더훔볼트재단(Alexander-Humboldt-Stiftung 1925) 그리고 독일아카데미(Deutsche Akademie 1925) 등이 1924-5년 사이 연방외무부에서 재정 지원을 받는 중개단체로 등록되었다. 이어 1928년에는 독일국제라디오방송(Weltrundfunksender)이 개국했다. 이들 중개단체는 1949년 이후부터 대외관계연구소(Institut für Auslandsbeziehungen), 독일문화원(Goethe-Institut), 독일학술 교류처(DAAD), 알렉산더훔볼트재단, 도이체 벨레(DW) 등으로 개편 또는 재조직되었다. 1989년엔 세계문화의 집(Haus der Kulturen der Welt)이 문을 열었으며, 1952년 설립된 InterNationes는 2001년 1월 독일문화원에 통합되었다.

독일문화원의 활동은 독일의 전체적 이미지를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두고, 독일어 지원과 문화협력 프로그램들을 운영한다. 2004년에는 서방 국가로는 처음으로 평양에 독일문화원 정보센터를 개설하기도 했다. 2008년 현재 91개국에 149개 문화원과 10개 연락사무소를 두고 있다.

독일학술교류처는 대학생과 학자들의 교류를 통한 대외 학술 관계를 증진하는 데 중점을 두며, 현재 231개 대학과 124개 학회·연구회를 회원으로 두고 있다. 주요 과제는 문화외교 및 학술정책, 개발정책, 국내 대학의 국제화 등이며, 유럽연합의 교류 프로그램에서 독일의 대표 단체로 활동한다. 2010년 현재 14개 해외 지부와 50개 연락 사무소를 두고 있다.

알렉산더훔볼트재단은 국제 학술연구 지원에 중점을 두고, 우수 해외학자들에게 연구비나 상금을 제공한다. 독일 유학 후 귀국한 외국인들에게 연구를 위한 체류 기회를 다시 제공함으로써 이들과의 유대 관계를 계속 이어간다. 2008년 현재 70여 개국의 외국학자 25,000명이 여기에 참여했다.

대외관계연구소는 이질 문화 간 대화와 타민족 이해, 민간 차원의



갈등 예방 등에 주안점을 두고 각종 이니셔티브를 주최하거나 연구 활동을 한다. 특히 문화외교의 파트너 또는 주최자로서 활동한다. 예를 들면, 외국에서는 독일예술 순회전시회를, 국내에서는 개도국·체제전환국 예술가들의 작품전시회를 열어준다. 또한 이슬람 국가들과의 문화대화와 중·동·남유럽의 시민사회 발전을 위한 미디어 프로그램 등도 운영하고 있다.

재외학교본부도 연방외무부의 협력 아래, 2010년 현재 세계 135개 독일 학교와 400여 개의 독일정부 지원 재외 학교시설들을 지원·관리한다. 이 기구에는 연방외무부 외에도 16개 주 정부가 참여하고 있다.

#### 4.5. 각종 재단

독일 특유의 또 다른 해외 활동단체로는 정치 재단을 들 수 있다. 이들은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FES), 콘라드아테나워재단(KAS), 프리드리히나우만재단(FNS), 한스자이델재단(HSS) 그리고 하인리히뵐재단(HBS)과 로자룩셈부르크재단(RLS) 등이다. 이들 단체 역시 부분적으로 중개단체들과 같은 문화외교 역할을 수행한다.

이들은 학술·연구 지원과 인적 교류 그리고 문화 행사 개최 등을 비롯하여 개도국이나 체제전환국에서는 민주화와 인권 개선 프로그램들도 운영한다. 문화외교 분야의 주요 사업으로는 체제전환국 및 유럽과의 협력 강화와 유럽 통합과정 지원, 중동유럽 체제전환국에 대한 서방체제로의 개혁 및 민주화 지원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세계화의 부정적 결과를 고려하여 글로벌 프로그램들도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어,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의 '세계화への 주도적 동참', '젠더 및 여성정책', 콘라드아테나워재단의 '이슬람과의 대화' 등이 그것이다.

그 외 각종 사회·문화장학재단들도 저마다의 비전을 가지고 문화외교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교회의 인도적 지원 사업, 폴크스바겐재단의 국제 파트너십 프로그램, 볼렌·할바크재단의 문화재 보존·박물관 건립기금 지원, 짜이트재단의 장학 및 국제 파트너십프로그램, 베르텔스만재단의 문화 지원 프로그램, 알리안쯔 문화재단의 국경을 초월한 문화 프로젝트, 베엠베재단의 국제 청소년 지도자 포럼 지원, 보쉬재단의 국제 문화 교류와 파트너십,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 등이 있다.

---

문화외교 분야의 주요 사업으로는 체제전환국 및 유럽과의 협력 강화와 유럽 통합과정 지원, 중동유럽 체제전환국에 대한 서방체제로의 개혁 및 민주화 지원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세계화의 부정적 결과를 고려하여 글로벌 프로그램들도 추진하고 있다.

---

---

국제적 기구를 통해  
 학술·문화·예술 분야에서  
 교류·협력한다는 점에서  
 유네스코도 문화외교 단체로  
 간주된다. 유네스코 지부는 자국의  
 이미지 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을  
 전개하며, 유네스코 문화정책 수립과  
 실행에 적극 참여하고,  
 비정치적 국제 협력을 통한  
 국제 평화유지에 기여한다.

---

#### 4.6. 국제기구

국제적 기구를 통해 학술·문화·예술 분야에서 교류·협력한다는 점에서 유네스코도 문화외교 단체로 간주된다. 유네스코 지부는 자국의 이미지 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을 전개하며, 유네스코 문화정책 수립과 실행에 적극 참여하고, 비정치적 국제 협력을 통한 국제 평화유지에 기여한다.

개별 프로그램들로는 지구촌 차원의 학습공동체 구축, 기초교육, 직업교육, 학술, 문화, 커뮤니케이션, 프로젝트 학교 및 전문가 네트워크, 국제 이해교육(인권, 다원주의), 정보윤리 교육 등이 있다.

유럽 문화정책을 협의하는 기구로는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가 있다. 유럽의 양심이라 불리는 이 기구는 47개 회원국의 인권·다원주의적 민주주의·법치국가의 유지를 비롯하여 유럽의 민주적 안정성 강화, 각종 사회 문제(학대, 소수민족 차별, 인간 복제, 마약 거래, 테러리즘, 부패, 조직범죄) 대처, 사회적 단결 및 권리 촉진, 다양성 속에서의 유럽문화 정체성 촉진 등을 과제로 삼고 있다.

#### 4.7. NGO

변화된 국내의 정치 현실에 대응한 문화외교에서 NGO가 큰 의미를 부여받고 있다. 그 이유는 먼저 전통적인 중개단체에 비해 더 많은 활동의 자유가 있다는 점이다. 국가적 활동이 사안에 따라 주권 국가에 대한 내정간섭으로 변질되어 갈등을 촉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는 NGO들이 사태 악화를 피하면서 활동할 수 있다고 본다.

다음으로는 다양한 분야에서 동시 활동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들은 고전적 문화 교류부터 위기 예방의 프로젝트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 걸쳐 동시에 참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활동비용이 저렴하다는 점이다. 새로운 세계 정치 환경은 더 많은 문화외교를 요구하는데, 문화외교 재정은 정체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NGO가 구원자로 떠오르고 있다. 아직까지 전문적이진 못하지만, 반면에 유동적이고 비관료적이며, 다양성을 지니고 있다는 강점이 있다. 그래서 NGO는 문화외교의 커다란 도전과 과제 앞에 스스로 헤쳐 나갈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 [ 5. 문화외교의 예산 ]

2000년도 문화외교 예산은 프로젝트 지원 4억 2천2백만 마르크, 재외 교사인력 및 프로그램 교사 인력 비용 2억 5천4백만 마르크, 재외 독일학교 및 학교분야 협력 3억 5천7백만 마르크, 기구·단체 지원 2억 8천7백만 마르크 등 총 11억 4백만 마르크(1999.1.1.~2001년12.31 기간의 마르크 대비 유로화 교환은 1 : 1.95583 비율로 산정되었기 때문에 약 6억 유로)로 책정되었다. 이는 전년 대비 1억 8천1백만 마르크 늘어난 것으로 연방외무부 예산 대비 31.8%, 연방 예산 대비 0.23%, 국내총생산 대비 0.03%를 차지한다(Auswärtige Kulturpolitik - Konzeption 2000).

통일 후 문화외교 예산은 한동안 줄어들었다. 1993~2005년 동안 부침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14% 감소했다. 문화외교 예산은 2006년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7년 5억 6천6백만 유로, 2008년 6억 5천8백만 유로, 2009년도의 경우 전년 대비 10.3% 늘어난 7억 2천 6백만 유로에 달한다(Bericht der Bundesregierung zur Auswärtigen Kulturpolitik 2003~2009).

## [ 6. 맺는말 ]

오늘날 독일 문화외교의 무게는 문화대화를 통한 유럽통합에 쏠려 있다. 유럽연합 회원국의 문화는 유럽 역내 문화정책의 한 종류로서 인식되고 있으며, 동시에 국민국가적 문화외교 원칙을 극복한 유럽 문화외교에 대한 요구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2009년 12월 1일 발효한 리스본 조약에 의해 유럽연합의 상임의장과 외교대표를 선출함으로써 유럽연합의 정치통합이 가시화되었다. 이로써 공동으로 유럽 외교정책을 펼칠 수 있는 틀을 갖추게 되었으며, 아울러 공동의 유럽 문화외교를 실행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 놓았다. 물론 유럽헌법에서 명시하듯이 아직까지는 회원국들의 문화를 뒷받침하는 범위에서 정책 지원을 하는 것이지만, 좁은 의미에서나마

---

오늘날 독일 문화외교의 무게는 문화대화를 통한 유럽통합에 쏠려 있다. 유럽연합 회원국의 문화는 유럽 역내 문화정책의 한 종류로서 인식되고 있으며, 동시에 국민국가적 문화외교 원칙을 극복한 유럽 문화외교에 대한 요구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

공동의 유럽 문화외교 노선에 부합토록 한다는 의미에서 긍정적인 미래를 기대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유럽연합의 문화적 정체성 자체를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유럽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기반이 되는 것은 문화가 아니라 정치라고 강조한다. 사실 유럽의 정치적 결속을 다지는 무엇인가를 찾는 데 있어 문화적 정체성은 잘못된 대답일 수 있다. 특히 유럽연합의 기본조약은 '다양성 속의 통일'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문화 정체성을 정의하려는 것 자체가 이미 모순이 된다.

이와는 달리 정치적 정체성은 하나의 정치 공동체에서 법치국가, 다원주의, 인권, 민주주의로서 구성되며, 이와 동시에 이들 정치적 공동 요소를 위협하지 않으면서 존재하는 모든 문화적·종교적 다양성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돼야 한다. 바로 이러한 정치적 요소와 문화적 요소가 동시에 정당성을 갖고 공존토록 하는 것이야말로 유럽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 올바른 답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문화외교는 문화적 정체성이 목표가 아니라, 정치적 정체성 형성을 위한 수단으로만 활용되어야 한다. 이는 물론 독일과 유럽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탈냉전의 국제 질서에서 자칫 문화 차이로 발생하기 쉬운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모든 나라의 문화외교에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발행처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한국 사무소

편집인 베르너 캠페터, 박상희

편집위원 김영희 안두순 안석교 양민석 이상열 정범구 정현백 최연혜(가나다 순)

주소 110-742 서울시 종로구 윤니동 98-5 삼환빌딩 1101호

Tel (02)745-2648/9 / Fax (02)745-6684 / e-mail feskorea@fes.or.kr & fesrok@fes.or.kr

<http://www.fes.or.kr>

FES-Information-Series는 유럽의 통합 과정과 독일의 정치 체제 및 발전을 중심으로 독일과 유럽의 다양한 쟁점들을 소개함으로써 해당 주제의 다양성과 상호 관련성을 부각시키고, 정책 대안에 대한 논의를 촉진할 목적으로 발간한다.

FES-Information-Series는 특정 정치 노선을 지지하지 않으며, 개별 주제들은 독일이나 유럽의 발전 추세를 관찰하고 평가할 능력을 갖춘 전문가가 집필한다. 여기에 수록된 내용은 필자들의 개인 의견이며,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힌다. FES-Information-Series는 부정기 간행물로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홈페이지(<http://www.fes.or.kr>)에서 전문을 내려 받을 수 있다.

Copyright 1998-2010 © by Friedrich-Ebert-Stiftung, Korea Office